

경제 안보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역할

2026년 04월 30일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정책실 자문위원

연원호 박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정책실 소속 자문위원으로, 지정학 및 지정학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전에는 국립외교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미·중 전략 경쟁, 기술 패권, 공급망, 경제안보를 주요 연구·정책 분야로 삼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정책·학술 매체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UC샌디에이고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스토니브룩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 국제 질서는 단순한 다자주의의 쇠퇴가 아니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재편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세계무역기구(WTO), G20과 같은 기구들은 전쟁, 지정학적 경쟁, 무역·기술의 안보화 속에서 효과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다자주의의 붕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편적 개방을 전제로 한 기존 질서가 약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선택적 개방, 조건부 참여, 신뢰 기반 협력, 그리고 기술·공급망 중심의 새로운 규칙형성이 등장하는 제도적 전환기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 점에서,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서울국제포럼 및 한국경제인연합회(FKI)와 지난 4월20일 개최한 국제회의 “Democratic Multilateralism at the Edge: Security, Economic Statecraf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in Transition (기रो에 선 민주적 다자주의: 안보, 경제안보, 제도적 회복력)”에서 발표된 조지타운대학교 및 CSIS의 빅터 차(Victor Cha) 교수, 하버드대학교의 크리스티나 데이비스(Christina Davis)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관유 스쿨의, Danny Quah 전 학장의 논문은 서로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지만, 하나의 공통 질문으로 수렴한다. “질서나 무질서냐”가 아니라 경제안보, 선택적 상호의존, 약화된 보편주의 속에서 어떤 방식의 거버넌스가 작동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좁혀진다. 즉, 누가, 어떤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음 단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계할 것인가?

Cha의 논문은 설득력 있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세계는 거버넌스 공백에 직면해 있다. 유엔 안보리는 강대국 경쟁과 전쟁으로 기능이 제약되어 있고, WTO는 무역의 무기화를 억제하는 데 점점 무력해지고 있으며, G20은 지정학적 균열 심화로 그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동시에 정책 의제는 크게 확대되었다. AI 거버넌스, 공급망 회복력, 팬데믹 대비, 청정 기술, 경제 안보 같은 현안들은 기존 제도가 제공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조정과 효과적인 규칙 제정을 필요로 한다. Cha가 G7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G7은 여전히 신뢰, 역량, 정책 조정 경험을 가진 선진 민주주의 협의체이며, 적절히 개혁될 경우 새로운 규칙 형성의 실질적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이 논문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여 중 하나는 G7 확대 논거, 특히 한국과 호주를 최우선 편입 대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을 단순히 상징적 참여를 바라는 열망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공급망, 우크라이나 지원, AI 거버넌스, 글로벌 보건,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기능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이다. 이는 논의의 무게중심을 지위에서 기여로 옮기는 중요한 전환이다.

그러나 논문은 분석적으로 별개인 두 질문을 구분할 여지가 있다. 한국이 G7 가입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가입할 경우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특히 세 가지 영역이 두드러진다. 디지털·AI 거버넌스,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 안보, 그리고 개발 협력·글로벌 보건·중견국 연대 구축이다. 한국의 G7 참여 논거는 따라서 단순히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G7이 직면한 실질적 거버넌스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 점은 억지력, 제재 이행, 기술 통제, 공급망 안보가 집약적으로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북한의 대러 유대 심화와 중국의 대북 관계 재공고화 시도가 안보·경제 영역을 가로지르는 권위주의 연대라는 광범위한 패턴을 가리키는 지금,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분쟁지로만 볼 수 없다. 제재 이행, 군사 협력, 전략적 물류, 경제 안보가 G7의 향후 의제와 직접 맞닿는 방식으로 수렴하는, 점점 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Cha 논문의 또 다른 강점은 회원국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제도 설계까지 진지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트로이카 방식의 상설 사무국과 이행 중심 태스크포스 제안은 의장국 교체 시 의제가 급변하며 발생하는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논문의 가장 실용적인 기여 중 하나다. 한국이 G7 체제에 보다

깊이 참여하려면, 그 역할이 위상과 가시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이행력·제도적 효과성 강화까지 포괄해야 한다. 다만 두 가지 더 광범위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다른 소규모 다자 체제가 아닌 왜 G7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G7 개혁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가. 한국과 호주가 포함되더라도 G7은 여전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역량을 높일 수는 있어도 대표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Davis의 논문은 현대적 조건 하에서 다자주의를 재개념화하는 데 특히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이 논문은 다자주의를 붕괴하는 질서로 취급하는 대신, 선택적 개방성을 조직하는 틀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매우 생산적인 개입이다. 핵심 질문은 이제 다자주의가 추상적 의미에서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행위자는 포함되고 다른 행위자는 배제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재량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가이다. 수출 통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적 예외, 기술·산업 경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핵심 쟁점은 전통적 의미의 개방 대 폐쇄가 아니다. 그것은 조건부 개방의 거버넌스다.

이 재구성은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에 관한 기존 설명들보다 경제 안보의 제도적 논리를 더 정밀하게 포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제 안보는 반드시 상호의존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으로 관리되고 위계적으로 분화된 형태의 상호의존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다자주의는 보편적 포용의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간의 선택적 협력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점점 더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은 더 큰 주목을 받아야 할 핵심 규범적·제도적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한 선택성은 어떻게 정당화되고 제한될 수 있는가. 경제 안보 예외가 확산될수록, 다자주의가 규칙 기반 질서라기보다는 강대국이나 연합체가 허용 가능한 참여의 경계를 결정하는 유연한 틀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과제는 단순히 다자주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개방이 재량적 배제로 전략하지 않도록 절차적·규범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대표적 국가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단순한 탈동조화나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안보의 기준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단절을 줄이고, 신뢰 가능한 파트너들과의 선택적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Davis의 논의가 보여주듯, 향후 다자주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질서”라기보다 참여의 조건, 예외의 절차, 배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제도적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선택적 개방의 흐름에 단순히 따라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과제는 선택적 협력이 자의적 배제로 흐르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안보를

이유로 일부 제한이나 예외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이 이를 편의적으로 확대하면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안보와 개방, 기술 보호와 시장 접근, 공급망 안정과 개발협력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중견국 외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

Danny Quah의 논문은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세계 질서 재건의 핵심 주체로 강대국이 아닌, 공통된 유인을 가진 소국들을 지목한다. 이는 중요한 개념적 전환이다. 질서 형성에 관한 문헌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암묵적으로 강대국 중심적이며, 제도적 재건은 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Quah는 지정학적 패권이 아니라 안정성, 예측 가능성, 연결성, 실행 가능한 규칙에 근본적 이해관계를 두는 국가들로 시선을 옮긴다. 이 논문은 전략적 경쟁 조건 하에서 질서를 유지할 가장 강한 동기를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보다 현실주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 주장은 체계적 불안정에 깊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질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능력이 없는 중견국 및 소규모 개방 경제에 특히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나 '충분히 다자적인(multilateral-enough)'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면 논문은 더욱 강력해졌을 것이다. 이 개념은 직관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분석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대표성의 폭은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의미 있는 거버넌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한가. 소국들이 종종 편승, 헤징, 또는 분할 전략을 강요받는 미·중 경쟁이라는 실제 제약 하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 없이는 논문의 주장이 규범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운영상으로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을 위험이 있다. 여전히 강대국 간 비대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유인 기반 연합이 어떻게 결속력을 유지하고, 이행을 유도하며, 제도적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한국에도 직접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단순한 소국도 아니다. 세계적 제조역량, 기술역량, 개발경험, 민주주의 제도, 안보동맹,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를 모두 가진 기술 선진 중견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역할은 강대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는 틈에서 규칙 기반 협력의 작동 가능한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CPTPP, 디지털경제협정, 공급망 협력, AI 규범, 개발금융, 보건안보 등은 모두 한국이 “충분히 다자적인” 협력의 실험을 주도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

세 논문을 종합하면 동일한 거대한 변화의 서로 다른 차원들이 조명된다. Cha는 G7 개혁과 확대를 통한 제도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Davis는 다자주의를 경제 안보 하에서의 선택적 개방 거버넌스로 재해석하며, Quah는 세계 질서가 지배적 강대국이 아닌 공통된 유인으로 결속된 더 광범위한 국가들에

의해 재건될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공통된 기여는 논의를 '질서 대 무질서', '세계화 대 분열'이라는 익숙한 이분법을 넘어 확장시킨다는 점이다. 보다 긴요한 질문은 지정학적 경쟁, 선택적 상호의존, 약화된 보편주의라는 조건 하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이다.

한국에 대한 함의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기존 국제 질서의 수동적 수혜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정책 경험, 외교적 위상을 갖춘 국가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의 정당성은 지위만으로는 뒷받침될 수 없다. 디지털 거버넌스, 공급망 회복력, 경제 안보, 개발 협력, 그리고 기술 선진 중견국들 간 연대 구축 등에서의 입증 가능한 실질적 기여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과제는 명망 있는 기구 가입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건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에 어떤 원칙, 아이디어, 그리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다.